

28<sup>th</sup>  
2018.03.31

# ESR

**EAST SEA REGIONAL BAROMETER**

## **ESR FOCUS**

[환동해지역의 역사성과 국제관계]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서 본 동해 ... 정성욱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동북아국제정치 ... 이명찬

## **연구원 탐방**

- 일본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 센터

## **Research Note**

- 환동해지역의 생태적 관계망과 장소성 ... 신진숙

# *East Sea Regional Barometer*

## Index

### 1. News and Information

### 2. ESR FOCUS ... 환동해지역의 역사성과 국제관계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서 본 동해 ... 정성욱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동북아국제정치 ... 이명찬

### 3. Research Note

- 환동해지역의 생태적 관계망과 장소성 ... 신진숙

### 4. 연구원 탐방

- 일본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 센터

## [ESR\_28] News and Information

## 제 16차 환동해포럼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서 본 동해”를 발표

지난 2월 26일(월)에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은 제 16차 환동해포럼을 개최했다.

미디어연구소 봄 정성욱 대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서 본 동해”를 발표했다.

정성욱 박사의 발표에서 환동해지역학은 인문학의 영역과 사회과학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역사와 국제관계 및 이론을 접목해 지역사의 흐름을 조망했다. 즉 환동해지역의 세력 균형을 전망하기 위해 냉철한 역사의 해석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본을 비롯한 주변 지역 및 국가의 견제가 작동하는지가 향후 지역의 세력 균형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환동해지역 내에서 과거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해 중국과 주변국과의 지역질서가 형성되었듯이, 강대국의 보편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는 주변국의 믿음이 결국 환동해지역 내 안정적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search Focus 1 참조).



발표하는 정성욱 대표

[ESR\_28] ESR FOCUS ...

## 환동해지역의 역사성과 국제관계

환동해지역은 통일신라 이전 삼국전쟁, 임진왜란과 근세에 러일전쟁과 한국전쟁 이후 냉전을 거치면서 탈냉전을 지향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경계, 북한의 핵위협, 식민지 유산으로서 해양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환동해지역 내에 세력균형을 이루며,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적 질서를 구가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본호에서는 두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서 동해를 보는 한편,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동북아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서 본 동해



정성욱 대표  
미디어연구소 봄

#### 1.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문학의 영역과 사회과학의 영역이 만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과생과 이과생이 중등 교과과정에서 서로 일찍 갈라지는 교육 제도를 유지해온 남한에서 인문학 영역과 사회과학 영역이 조우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공학이나 자연과학이 흔히 ‘문·사·철’로 축약되는 인문학과 통한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생소해 보일 수 있다. 즉 한국적 상황에서는, 측정을 수반하는 관찰이나 실험 등은 잘 하지 않고 주로 서적을 참조해서 익힌 질서에 따라 문자 열이나 언술을 생산하는 기술을 구사하는 문과생들이라고 함께 뭉뚱그려질 수 있는 인문학도와 사회

과학도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도 과학의 언어로 사회를 해명하려는 시도인 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당연한 조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이나 어려울 일이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당연한 만남을 상정하는 것이다. 과학의 방법론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회과학도 그것이 과학인 한에서는, 자연과 사회라는 대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의 그것과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과학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방법론은 과학적 방법론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대해 이 글은, 여러 제약을 감안하여, 두 분야의 경계에 있는 인문학의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돼온 역사와 사회과학이 가질 수 있는 관계로 화제를 좁혀 이야기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역사와 사회과학의 대화가 동해의 미래와 가능성을 밝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를 전망해볼 것이다. 미리 밝혀두건대, 이런 이야기와 전망은 지금까지의 짧은 서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철학과 시학의 언어를—문·사·철, 과학의 언어 같은 인류가 개발해낸 대표적 보편 방언들의 모태가 되는 종교의 언어까지도 때로는—차용하게 마련이다.

#### 2.

과학 언어의 핵심은 결국 현실이 그에 따라 움직이는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는데, 이런 맥락의 원인과 결과는 되풀이된다고 가정된다. 과학은 실험과 관측에서 나오는 측정 데이터를 통해 이렇게 가정된 되풀이를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검증한다—되풀이되지 않으면 반증된다. 사실, 데이터 측정 자체도 반복이 가정된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학 언어의 최종 목적지는 규칙적인 인과관계를 해당 분야에서 전부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 역시 그 전제가 충족되는 한 늘 반복되는 것으로 가정된 인과관계를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목표는 사회를 대상으로 이런 규칙적인 인과관계를 전부 찾아내서 정리하는 데 있고, 과학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의 본질은 이런 인과관계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정리해내는 데 있다. 그런데 서로 떨어져 있는 둘로—혹은 그보다 많은 다수로—센 것임에 틀림없는 원인과 결과,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원인의 변화를 되풀이해서 결과의 변화로 이어주는 것일까? 동일한 원인의 변화를 동일한 결과의 변화로 늘 이어 주는 매개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 정체는? 그것이 인과와 맺는 관계의 성격은? 원인의 변동이 명하는 대로 항상 일어나는 결과적 변동을 강제하거나 설득하는 힘 또는 이런 힘이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연속적 통로에 대한 물음이다.

특정 시점의, 사료에 의해 재구성되는 역사상은 확실히 이런 통로의 연속성을 전제한 위에서 그려진다. 역사적 사건 목격자의 감각기관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후대 역사가의 분석 대상이 될 사료를 남기게 만든 사태를 역으로 추리해내는 일도 이런 역사상 재구성의 한 예인데, 이런 역추리 시도에 개재될 수밖에 없는 전제 하나가 기록된 사건과 남아 있는 사료를 잇는 연속적 시공간의 존재다. 그러나 이런 연속적 시공간에 펼쳐진 과학적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역사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이런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나의 고유명사로서의 어떤 역사상을 또 다른 역사상에 병렬했을 때 태어나는, 역사 분야 고유의 이해에 있다. 즉 하나의 구체적 역사상이 다른 구체적 역사상에 의해 보다 밝게 조명되는 사태가 역사적 이해의 본령이라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해의 맥락 속으로 들어온 역사상들 사이를 연속적으로 메우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밝히는 것으로 역사가의 책무가 완수된다고 보는 것은 역사를 과학으로 환원해버리는 사고다. 이렇게 보면, 되풀이되는 인간 본성을 역사가 유용해지는 근거로 삼았던



투키디데스의 역사관 역시 역사 고유의 역사와는 얼마간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역사상 병렬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 어느 한 시기의 역사상을 한반도에서 삼국통일이 처음 이루어지던 시기의 역사상에 병렬한다고 해서 본격 역사가 노리는 바와 같은 역사적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해가 생겨나려면 병렬되는 역사상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방금 ‘민족’ 대신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의 유전적 연속성을 초월하는 규칙을—이러저런 통시적 변모와 공시적 변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확인되는 음운론적, 구문론적, 의미론적 규칙을—준수하는 집단을 뜻하기 위해서다. 즉, 역사가 나름으로 그 정체를 이해하려는 집단은 과학적 이해가 전제하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속성과는 다른 종류의 연속성에 기반한 동일성을 가진다. 단적으로 그것은 규칙의 연속성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는 집단이다. 나아가 민족이 이런 무리의 하나일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전해지는 유전자 덕분이 아니라 동일한 문화적 규칙을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는다는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사회도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무리인데, 바로 이런 무리의 성격을 과학의 언어로는 하지 못할 방식으로 조명해주는 것이 역사다.

물론, 이런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예컨대 모세 오경의 하나인 신명기에서도 두드러지는 생각이다. 논어 위정 편 한 대목에도 비슷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데, 십 세가 지나도 알 수 있느냐는 자장의 물음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은은 하의 예에서 유래했으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고, 주는 은의 예에서 유래했으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누가 있어 주를 잇는다면 백 세 후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졸역)

나아가, 말로 된 사료를 추적하는 역사의 언어로 통시적 단면의 연속성이 조명됨으로써 백 세가 지난 다음에도 성격의 동일성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집단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투키디데스가 그에 대해 역사를 쓰게 만든—종류의 사건이 전쟁이다. 물론,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성능은 과학의 언어로도 조명돼야 할 터이고 이런 전쟁의 이해에 군비 관련 통계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전쟁이 정점을 이루는 집단적 갈등은 과학의 언어만으로는 전모가 해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언어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해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3.

환동해지역 전반을 배경으로 일어난 전쟁을 나눠보면: 첫째, 통일 신라를 낳은 전쟁과 임진왜란; 둘째, 러일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전환기 유형의 전쟁으로 청일전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적해볼 수 있는 것이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서 임진왜란까지와 이후 서구 열강이 도래하기까지, 몽골군의 침입을 제외하면, 환동해지역 전체를 뒤흔든 전쟁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데이비드 강(David C. Kang) 남가주대(USC) 교수가 거듭(예컨대, 2004년과 2007, 2010년에 출간된 다음 논문 및 단행본 둘에서: Hierarchy, balancing, and empirical puzzles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28(3), 165-180;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trade and tribute*, Columbia University Press) 지적해온 대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가졌던, 세력 균형보다는 위계에 바탕한 안정적 구조에서 비롯한 것인지 모른다. 한편, 이런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은 공유 규칙에 대한 합의가 정착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을 터인데, 임진왜란은 근본적으로, 이런 규칙이 유래한 중국의 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공’으로 환유되는 지역 질서에 도전하는 일본이 촉발한 무모했던 전쟁이다. 이런 양상은 두 번째 시기에서도 반복된다. 일본은 이런 무모했던 과거사, 특히 두 번째 시기의 과거사에서 유래한, 이웃들의 의심을 불식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탓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물론, 이 두 번째 시기와 저 첫 번째 시기를 가르고 이어 주는 것은 서구 열강과 함께 온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지역 질서의 골조로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진왜란 발발 소식에 함대를 보내 명나라를 돕겠다고 나선 나레스우안(Naresuan) 시암 왕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연루된 주변 조공국도—수혜자로서—지키려 했던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대체할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도입된 이후 역내 주요국 사이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인데, 이 전쟁은, 이홍장이 조선 및 베트남에 대한 정책 관할 부서를 조공 관련 부서이던 예부에서 휘하의 직할 부서로 바꾼 것이나 청불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용 구경 대목에 그 ‘왕도적’ 이상의 대강이 제시돼 있는 전통적 지역 질서의 성질이 ‘패도적’인 것으로 변해 가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한편, 여기서 확고해지기 시작한 일본의 지역 패권은 극동 진출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러시아와 이를 우려하는 영국의 후원을 받은 일본 사이에 벌어진 러일전쟁을 통해 결정적으로 굳어지는데, 특히 동해와 관련하여 지적해둔 만한 것은, 이 전쟁의 결과로 성립한 일본의 지역 패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동해가 일본의 내해였다는 점이다—이 내해의 주요 항구로 부상했던 니가타가 현 일본의 환일본해정책 거점 도시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를 대체한 일본 중심 지역 질서는 무모했던 진주만 기습을 결정적 기점으로 붕괴한다.

다음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냉전 구도로 쪼갠 한국전쟁 이후, 영국을 대체한 미국이, 백여 년 전 한반도를 놓고 일본과 일전을 불사했던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지역 내에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강대국이 됐다는 점이다. 또 근래, 냉전에서 패배한 후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러시아가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며 지역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예컨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갈등 심화와 중국의 부상을 배경에 놓고 볼 때 그 입체적 성격이 보다 온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새삼 돌아보게 되는 것이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전 지구적 갈등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이고 환동해지역이 전 지구적 패권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과거를 상기할 때, 국제정치를 패권 경쟁으로 환원하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지금 바로 이 지역에 서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과 경쟁할 후보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를 국제정치의 가장 큰 무대로 만들고 있는 중국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여 온 일본은 지역 정세의 구조적 변동을 능동적으로 소화해서 효과적으로 그에 대처하려는 외향적 모색과 실천을 늦게나마 다양한 부면에서 해오고 있다. 사실, 개헌 시도 역시 이런 노력에 연계돼 있다고 하겠다. 반면 남한은,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국제정치적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강압적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민주화 과정에서 역사적 당위로 포장되어 널리 수용된, 북한과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을 둘러싼 내적 갈등과 분열 탓인지, 역 내외 국가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

를 향한 모색과 실천을—일본에 비겨 볼 때도—소홀히 해왔다. 그동안의 비약적인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감안하면 일종의 문화지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국의 전 지구적 영향력 확장 움직임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저항하고 있는 요새 국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놀랍게도,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을 독립 변수로 세워 왔다. 사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요새 국가의 향후 선택에 환동해지역의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예컨대, 국제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을, 일본의 군비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게끔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불신을 키운 사드 배치를 촉발한 것도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정치의 독립 변수가 되는 국가를 강대국으로 좁혀 보는 현실주의 이론과 잘 맞지 않는 특이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동해가 배경이 된 전쟁을 중심으로 간단히 개관해본 이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동해의 가능성은 주도권 경쟁의 구도가—그것이 중국 중심이건, 일본이나 미국 중심이건, 러시아에 의한 균형이건, 혹은 또 다른 어떤 귀결이건 간에—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극대화되리라는 전망이 가능한데, 이런 전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가 북한이다. 여기서도 한반도 안정이 환동해지역 전체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변수의 비중이 이렇게 커진 배경에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강대국 정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국제정치의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 내해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동아시아 미래 질서에 대한 예측에 일종의 상수항으로 상정되곤 하는 이런 시도의 성패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건 간에, 되풀이해서 강조하건대, 동해의 건설적 가능성은 지역 질서가 모종의 정치적 균형 상태에 도달해야 바람직한 현실로 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폭에서 환동해권의 미래를 짚어 보자면, 그러므로, 중국이 미국의 맞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순조롭게 성장할 것인지를 핵심적인 변수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온당한 판단은 중국 사회 전반과 주변 환경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없이는 불가능하다.

#### 4.

결국, 지역사의 큰 흐름을 살피건대 동해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타진에는 지역의 세력 균형에 대한 전망이 꼭 포함돼야 하고 여기에는 방금 거론한, 북한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과 이들 사이의 협력 및 갈등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빠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의 언어에 적절한 자리를 주지 못하는 전망은 아무래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연루된 개별 국가들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이는 상황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근사치를 구해볼 수 있을 변수들로 구성된 여러 상황에 대해—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진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역 내외 개별 국가의 성격을 고려하는 한에서는, 예컨대, 유럽의 경험에 바탕을 둔 세력 균형 이론의 적실한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달아 둘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력 균형 이론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이런 논의는, 특히 역사가 드러내는 강대국의 성격에 결부될 수 있는 주권 침해 의도에 대한 물음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의문에 빠뜨린 것이 전후 자유주의적 질서의 유지와 확산에서 미국이 감당해온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의지다. 냉전 종식 이후의 유일 강대국의 의도에 대한 이런 불안의 심화는, 역설적으로, 대미 세력 균형 움직임을 키울 수 있

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을 주도할 만한 강대국 내지 세력으로 유럽연합,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꼽을 수 있겠는데,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자유의 제국’으로 요약되는 성격을 한층 분명히 하는 것이 이런 움직임을 봉쇄할 가장 좋은 방도 가운데 하나겠다. 그런데 이런 처방을 예컨대 중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공지의 사실로 만들어 과시했던, 주변 국가가 인정하는 동시에 거기 기댔던 ‘비제국주의적’ 의도를 자신의 성격에 연결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이에 관련된 중국의, 역사적 축적을 통해 습관으로 다져진 성격은, 예컨대, 1970년대 말 주변국에 손을 뻗친 통일 베트남과 일전을 불사하면서도, 하노이로 거칠 것 없이 열린 평원에 바로 접한, 험준한 접경으로부터의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자 진격을 멈추고 철군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선언서 등의 건국 문서에서 이미 선명한 미국의 보편적 성격과 1962년에 벌어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나 저 베트남과의 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국의 성격이 한층 선명하게 공유됨으로써 이들 강대국의—보편성을 갖춘, 따라서 수용성 높은—의도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믿음,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지구의 평화와 번영이 한층 안정적으로 구가될 수 있을 만큼 굳건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 논의가 필요하다.

달리 문건대, 주(周)대를 모범으로 놓은 문화 전통의 테두리 안으로 통합됐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함께—이를테면 이 두 강대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기독교 전통과 지역의 토착적인 종교적 시선들을 융합함으로써—그에 방불한 문화적 규칙의 공유 상태에 도달하여 근대 이전에 유구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과 유사한 안정적 지역 질서를 내발적으로 형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환동해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새로운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지역의 성격을 새롭게 조형할 보편적 규칙을 버려 공유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인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의 긴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본고는 일단 여기서 맺어 둔다.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동북아국제정치



**이명찬**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 1.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5~16일,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일러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이 가장 주목한 것은 북방영토문제였다. 그러나 반환에 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북방영토 문제에 진전이 없었음이 밝혀지자, 국민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었다. 미디어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푸틴의 일본 방문은 성공이었다고 평가한다.

일본의 대러시아 외교에는, 2개의 면이 있는데, 하나는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의 체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큰 진전은 없었다. 또 하나의 면은,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러 관계의 긴밀화가 불가결한데, 이번 정상회담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국내 정치의 관점에서부터, 보다 짧은 시간 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후자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진행된다. 전자에 대해 큰 진전은 없기는 했지만, 우선은, 전 도민의 보다 간소한 형태로 북방영토 방문에 길이 열렸다. 동시에, 북방 4도에서, 「특별한 제도」아래에서 행하는 공동경제활동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 개시에 합의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3000억 엔 상당한 경제협력 안전에 합의함과 동시에, 안전보장 분야에서 2+2를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공동경제활동」에 대해서 「평화조약 체결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푸틴도 아베 총리의 주장에 동의 했다. 그렇다 면 성과는 없었다거나, 아베 수상이 너무 양보했다고 하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 전문가인 아비루 다이스케(睨蒜泰助)는 북방영토의 반환과 평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첫째는, 해결한다고 해도,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즉, 인도의 대상은 하보마이 군도(齒舞群島)와 시코탄섬(色丹島)만이라는 것이다. 구나시리(國後)와 에토

로후(擇捉) 두 섬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각오하고 교섭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는, 일정한 신뢰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문가가 매년 항례로 모이는 발다이 회의 장소에서, 「중국과의 사이에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셋째는,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적용 외로 해야 한다. 러시아의 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이 만일 인도되더라도, 일본이 주권 혹은 시정권을 가지게 되어 미군이 주둔하는 일이 있으면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의 여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푸틴 대통령에게 북방영토를 인도할 의사는 없다」 「푸틴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경위를 되돌아보면, 러시아 측의 발언은 일관되고 있었다. 러시아의 외무성은 “일러 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것은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뿐이다”라고 계속 말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무승부」라고 말했을 뿐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 표현에 일본 측이 과잉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다.

결국, 푸틴의 일본 방문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국영 신화사통신은 일러정상회담에 관한 논평으로 「아베 수상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중러 관계의 토대를 흔드는 것은 어렵고 계획은 기대를 벗어날 것이다」라고 반발하였다. 게다가 「(아베의) 사익만을 추구한 제멋대로인 외교적 사고는 일본이 이웃나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을 틀림없이 곤란하게 할 것이다. 단순한 일방적인 망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아베 수상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일·중간에 벌어진 갈등, 즉, 2010년의 중국 선박 나포 사건이나, 2012년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둘러싼 일·중간 갈등이 현재까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에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관방부 장관이 6월 29일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군기가 17일에 일본을 향해 남하하여 항공 자위대기가 긴급발진(스크램블) 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양 비행기는 서로의 배후로 접근하려고 서로 추적하는 「공중전」과 같은 상태에 한때 빠져 있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가 이번 일러정상회담에서 얻고자한 것은,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것이 1차 목표였지만,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전략적 중립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1차 못지않게 중요한) 2차 목표가 있었다. 이번 회담은 일러 양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국제정치의 큰 판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일본의 의도가 엿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 2.

2016년 5월 7일에 아베 수상이 러시아의 소치를 비공식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약 3시간 10분에 걸치는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당시, 아베 수상은, “「2도 반환」을 할지 말지만을 논하는 것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으로 평화 조약의 교섭을 하자”라고 푸틴 대통령에 제안했다. 새로운 접근은 일본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여, 북방 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측은 과감히 대형의 경제협력을 진심으로 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매우 만족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9월 2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일러정상회담으로는 한층 더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9월의 내각 개각으로 경제산업 대신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를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담당대신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일본은 공동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도 마음껏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 회담이 끝난 단계에서 아베는 북방영토 문제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12월 15일의 일러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2도 반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런데, 11월 19일의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의 일러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러시아의 태도가 일변했다. 푸틴 대통령이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러시아의 주권 하에서 실시한다.”라는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다.

왜, 러시아 측의 태도가 돌연 냉엄해졌는가. 여러 가지 억측이 있지만,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차기 국무장관에 엑스 모빌 CEO인 렉스 틸러슨을 임명했는데, 그는 푸틴 대통령과 지극히 사이가 좋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트럼프는 러시아의 크림 침공에 이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러시아에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제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를 G8로부터 제외했다. 시리아 문제에서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고, 간접적인 전투상태를 초래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걸핏하면 푸틴 대통령과 대립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최악의 관계였던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본심을 털어놓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일본 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베는 12월 15일의 정상회담은 잘 될 것이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차기대통령으로 정해짐으로써 단번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회복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고립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이제 일본에 다가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태도를 경화했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영토 문제로 강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푸틴 자신이 16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북부에는 기지가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한다. 일미안보조약으로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는 모른다. 일본의 여러분은, 러시아 측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즉, 푸틴은, 두 개의 섬이 일본의 주권 하로 복속되는 순간,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이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닌가, 러시아를 견제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려하고 있다.

2도 반환문제에 관해서, 일본 기사가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에서, 소련 측이 하보마이·시코탄의 두 개의 섬을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푸틴 대통령은 “우선 국교 회복을 선행시켜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하보마이·시코탄을 어떤 형태로 반환할 것인지 교섭한다, 라고만 정해진 것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무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즉, 두 개의 섬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주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반환할 것인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한층 더 놀랄 만한 말을 했다. “게다가, 그 후 일본은 일소공동선언을 부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본이 일소공동선언을 부정했던 시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이다. 그 이전의 하시모토 내각, 오부치 내각, 모리 내각까지는, 1956년에 일러 사이에 있었던 일소공동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고이즈미 내각 시대에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다나카 마키코(田中真紀子)가 「“일러관계는 1973년에 행해진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과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발표한 일소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여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부정해 버렸다.

1973년의 일소공동성명에서는,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으로부터 한층 더 나아가, 북방영토문제를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의 두 개 섬뿐만 아니라, 구나시리, 에토로후섬도 추가한 네 개 섬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경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다나카의 뒤를 이은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도 그것을 긍정해 버렸다. 이렇게 하여 4도 반환을 전제로 하자 일러교섭은 다시 단절됐던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러시아에 영토문제는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 3.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과 2008년 이후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이 명확해지고 일련의 세력전이적 상황이 관찰되면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제도화된 측면이 있다. 이 체제의 주요 특징은 미국의 태평양동맹에 일본을 편입시켜 최근까지 ‘바퀴 축과 살(hub and spokes)’ 체제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과 양자 간 비대칭동맹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 내에 미군기지를 설치하여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의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핵심적 구도였던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중국이 산호도(Mischief Reef)를 점령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해양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된 원칙적 입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분쟁에서의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존중이다. 이어 2010년 7월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1995년에 제시된 원칙에 대해 항행의 자유가 미국의 국가이익이고, 관련 당사자 일방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며, 미국은 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런 원칙적 입장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센카쿠열도와 관련해서도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었는데,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에는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일견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일·중 양국은 커다란 파워시프트(power shift) 속에 있었는데, 최근의 센카쿠제도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파워시프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다. 경신(庚欣) 일본연구소 부소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2012년)에 中·日 양국이 전에 없던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中·日관계가 1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中·日간의 최근의 사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동시에 ‘대국화(大國化)’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中·日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 형성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일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은 中·日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中·日 양국이 각각 ‘대국으로의 변모’를 꿈꾸며 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전후 질서 및 성과를 부정하고 군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적수가 되었다. 이에 일본은 고의적으로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미국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2013년 12월, 아베정권은 일본 최초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의 결정했다. 이 중에 러시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 일층 엄중함을 더해가고 있는 중, 안전보장 및 에너지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일러관계를 전체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밑줄 친 부분이 주로 중국의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확장주의적 활동을 의미할 것이다. 즉, 현재 아베정권의 對러시아 외교의 배경에는 그의 대중전략이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對중국에서 미일동맹진영에 합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이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키타노(北野幸伯)의 대중전략으로서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다음의 기술은 흥미롭다.

중국은, 「일본에는 센카쿠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영유권도 없다!」라고 공언하고 센카쿠 강탈을 향한 포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센카쿠 유사’때, 「일본·미국 vs 중국」이면 일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vs 중국」, 즉, 미국을 뺀 일대일 대결이 되면 일본은 질 것이다. 통상 병기의 싸움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에 핵으로 위협받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필승 패턴 「일본·미국 vs 중국」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트럼프 신 대통령과 양호한 관계를 쌓아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센카쿠 유사’에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러시아다. 만약, 「일본·미국 vs 중국·러시아」의 싸움이 되면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른다. 게다가, “일본의 섬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러시아와 싸울 수 있을까!”라고 미국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악의 패턴은, 「일본 vs 중국·러시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일본에 승산은 1%도 없고 센카쿠는 확실히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고하게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분열시켜 러시아를 중립에 세워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키타노의 주장은 미일 관계가 호전되면 될수록 중국은 센카쿠 침략이 어려워지고 일본은 보다 안전하게 되고, 일러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그만큼 중국은 센카쿠 침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발하여 미·러 관계가 극적으로 악화되고, 일본도 G7국가들과의 결속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미국, 유럽 국가들에 의한 러시아 경제재제의 스크럼에 합류하자, 러시아는 일련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와는 일선을 그은 중국과의 관계를 급진전 시켰다. 특히 일본이 염려했던 것은 중·러의 안전보장 면에서의 급접근이었다. 2016년 9월, 러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처음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문제, 중국은 남중국해문제로 미국과의 대립하던 중, 중·러는 서로 접근을 연출하는 것으로 미국에게 전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이러한 중·러의 전략적 접근의 흐름에 강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러가 안전보장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올릴 필요가 있다. 센카쿠제도의 주권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이 있으면, 일본에 있어서는 매우 귀찮은 것이 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러시아와의 관계를 쌓아올려 둘 필요가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이 타이밍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세스의 재개를 단행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2016년 5월에 아베수상이 제안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플랜은 푸틴의 희망에 화답한 것이다.

#### 4.

대두하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자는 주장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자와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은 미국과,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과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는 세 번째이다. 러시아는 일본 이상으로 중국공산당과의 친교가 깊고 길다.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포위망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길버트 로즈만(Gilbert Rozman)도 오자와의 생각에 가깝다. 미국은 푸틴이 중국과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문제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협조한다든지, 중국의 패권을 봉쇄하기 위해 일러가 공동이해를 모색한다는 등의 발상은 단지 희망적인 관찰일 뿐이다. 아베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의 결과로서 지정학적인 보상을 기대한다면 러시아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응할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 보면, 푸틴과의 신

외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구나시리와 에토로후의 군사기지를 인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준비를 지금 이상 추진하지 말고 중·러 간의 무기거래나 합동군사훈련을 용인해주는 것 등 푸틴의 지정학적 어젠다에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탈할지도 모른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신중한 전문가들은 일본은 미국편에 서있으며, 결국은 중·러 관계가 강화되어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으로 파악한다. 미국은 러시아 국내에 일본과의 관계개선 지지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중·러 관계가 진전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보다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러시아 제재가 약화되는 것이다. 일러 간에 강력한 경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G7에 의한 제재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에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대항하고 있는 노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상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북방4도의 반환이 아베 정권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러시아의 관계자 다수는 평화조약체결이나 영토 문제의 타개 이전에 먼저 경제적인 대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면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이다. 북방영토문제의 미해결은 많은 부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정부의 '4도 일괄 반환' 주장과 '2도 선행 반환' 주장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잦은 '골대 이동'이 북방영토 해결을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물론 일본정부의 그러한 결정에 미국정부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의 산물이거나, 미일동맹정책의 대가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대국간 동북아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작용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임이 명백하다. 일본이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신뢰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70년 가까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對러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신뢰를 얻기까지 앞으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그 결과가 반드시 일본이 기대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 하겠다.

## [ESR\_28] Research Note

### 환동해지역의 생태적 관계망과 장소성

신진숙 HK교수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1997년 동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계속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논리는 국가 주도형 발전국가 담론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이라 불릴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최근의 중국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국가들의 고도성장 동력은 대부분은 산업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축적체제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원자력발전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체제의 형태와 상관없이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발전모델, 즉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전략이 현실화하는 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막대한 전력이 요구됐으며 그것은 원자력발전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원전)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 동아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2018년 현재, 한국에 24기(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결정), 일본에 43기, 중국 34기, 대만 3기가 운영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지역에 배치된 원전 수는 한국과 일본만 놓고 보면, 한국이 18기, 일본이 28기(2016년 5기 폐쇄)로 추정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신화의 배경에는 핵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원전신화가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 신화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기점으로 그 위상이 크게 변화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동아시아 근대화화 산업화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재난과 피해 중 하나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 생태관계망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국가의 발전을 상징해온 원전 풍경이 이제는 잠재적인 재난을 내재한 위험경관(riskscape)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한 것이다. 3.11 이후 달라진 이러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은 탈핵 또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오히려 핵의 관점에서 본다면, 환동해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산

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진입한 것과도 연관된다.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특정 국가의 환경적 재난과 그 피해가 한 국가에만 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위험이 출현한다. 벡이 세계위험사회라고 진단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테러위험 등과 같이 지구적 규모의 위험이 실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국가 내부에서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국과 몽골 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 대기 질에 영향을 주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동해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바다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초국경적 환경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환동해지역 생태관계망 역시 이러한 지구적 위험경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생태관계망에 가해지는 위험은 그 자체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국가 담론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삶과 세계를 만드는 생태적 대안을 찾는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의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태 중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들로 표현된다. 근대 이후 생태담론들이 동아시아 근대화(산업화) 담론에 대항하는 대안담론으로 구성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 담론에 ‘균열’을 내는 다양한 생태 담론과 실천 내러티브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환동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위험경관과 재난의 양상 및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공유자원에 대한 로컬리티 자체의 자치와 관리, 생태민주적 공공성과 환경정의의 결합, 재난을 매개로 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각각 로컬-국민국가-글로벌이라는 세 층위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것이다. 기실 이러한 층위들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지역과 로컬, 국가와 글로벌 차원들이 서로 다중적 스케일로 절합하면서 일상적 삶의 생태적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혹은 환동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환경의 변화가 이 세 층위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며, 이는 상호 간 연대와 불화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

위험사회 혹은 재난에 대한 접근이 파편화된 시선이 아닌 전체성(totality)의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재하는 경험적 물질적 위험과 재난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도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콘텍스트적 물음들을 제시하는 학제화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험이나 재난에 대한 객관적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구성 과정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보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sup>1</sup>

<sup>1</sup> 이 글은 2018년 2월 25일,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국내학술회의(주제: 지역연구의 생태학적 전환)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 [ESR\_28] 연구원탐방

###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지역연구(NEAR)센터

북동아시아지역연구 센터 (Institute for North East Asian Research - NEAR 센터)는 2000년 4월 시마네현립 대학의 개학과 함께 시마네 현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살리면서 일본의 동북아 지역 (중국, 대만, 한국·북한, 몽골,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일본)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식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 시설입니다.

#### ○ 주요활동내용

1. 정보의 수집과 제공
  - 1) 센터 홈 페이지
    - (1) <http://hamada.u-shimane.ac.jp/research/organization/near/> (일어판)
    - (2) <http://hamada.u-shimane.ac.jp/en/research/organization/near/> (영어판)
  - 2) 정보지의 발행
    - (1) 뉴스레터 『NEAR News』 (년 2 회 간행)
    - (2) 발간 학술지 『북동아시아 연구』 (년 1회 간행, 복수의 심사자에 의한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
2. 조사연구사업
  - 1) 북동아시아학 창성[創成] 프로젝트: 「북동아시아학」의 창성을 목표로 하여, 그 중심 조직으로서 「북동아시아 연구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6회 정도 개최).
  - 2) 한일·조일교류사 연구 프로젝트: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동아시아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학술적 입장에서 폭넓게 한일·조일관계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일한·일조교류사연구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4회 정도 개최).
  - 3) 북동아시아지역 연구: 「북동아시아학」의 창성이라는 과제를 보다 풍부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연구원들의 전문 분야와 인맥을 기초로 연구회를 조직하고, 대학 내외로부터 지원금을 수주하여,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대학원과의 연계

NEAR 센터 준연구원 제도: 대학원 박사후기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 중에서 박사논문 집필과 북동아시아학 창성[創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한 연구계획을 작성한 자를 준연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센터가 그 연구활동을 지원·지도하는 제도

### 4. 지역사회와의 연계: NEAR 센터 시민연구원제도

### 5.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조선 관계 자료목록

##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주요사업

### • 종합적인 환동해지역 정보 제공

환동해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생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환동해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 • 학제적인 지역연구의 현실화

환동해지역을 총체적인 시각 속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현실화합니다.

### • 지역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환동해지역 연구자 및 연구소와 네트워킹하고 학문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문가를 배출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적극적으로 양성합니다.

### •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

환동해지역 연구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문의 사회화를 추진합니다.

## 환동해지역연구센터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은 인문한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을 응집하고 연구 성과를 혁신화하고자 **‘환동해지역연구센터(East Sea Rim Research Center)’**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 본 연구센터는 **환동해지역 연구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희대학교 인문한국사업단  
**환동해지역연구센터**  
East Sea Rim Research Center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131호

- TEL : +82 (0)31-201-2384
- FAX : +82 (0)31-205-2384
- E-mail : kiga@khu.ac.kr
- Website : <http://iga.khu.ac.kr>